

오늘 尹 형사재판 시작...탄핵 이후 첫 공판

최상목·조태열 증인...조지호·김봉식·김용현 이번 주 법원, 尹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14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서울고법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

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로 형사재판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4차 공판과 김 전 장관 등의 4차 공판도 이번 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

관, 김용균 전 대령의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 진행된 2·3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자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과 ‘서울대 N번방’ 주범의 항소심 선고고 이변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남·권혁중·황진구)는 오는 18일 오전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뉴스1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민주당, 순천시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8명과 김영록 지사, 시장·군수, 22개 시·군 시·도의원,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2000여 명의 당원과 지지자가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뜻을 모았다. 조계원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뿌리내리고 있어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남도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양향자, 국힘 대선 경선 출마 “눈부신 영광 되찾아올 것”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AI 스타트업 기업인 ‘아스테로포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행보를 시작했다. 양 전 의원은 “4월의 봄비와 5월의 꽃바람이 6월 푸름을 불러올 때, 국민의힘의 눈부신 영광을 되찾아오겠다. 이기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양향자는 여러 후보의 모든 장점과 국민의힘에 꼭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한동훈 후보님의 젊음과 새로움, 안철수 후보님의 과학기술 전문성, 홍준표 후보님의 추진력과 서민성, 김문수 후보님의 소신과 강단, 유승민 후보님의 경제 전문성이 그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기에 국민의힘에 절실한 호남표, 기업표, 셀러리엔표, 여성표, 청년표, 과학기술인표를 더 가져올 수 있다”며 “누가 후보가 돼도 가질 수 있는 보수 고정표와 더불어 가장 많은 플러스 알파표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변과 돌풍, 그리고 드라마가 있는 경선이어야 한다. 본선 승리의 확신과 정권 창출의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새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순천시 ‘2기 전남기본사회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11년, 세월호 선체 보전·추모 사업 가시화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
선체 1.7km 옮겨 영구보전, 추모·체험 복합시설 갖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선체를 영구 보전하고 추모·기억·안전 교육 등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 고하도 신항만 배후부지에 짓는 가장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 사업은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세월호생명기억관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연대하고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해양 안전 복합 시설이다. 세월호 선체도 생명기억관 내에 영구 거치·보전되며 4·16 기역관, 생명공원과 생명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사업 부지는 선체 임시 거치 장소

인 목포신항만과 인접한 해상 매립 예정지 3만4000㎡다. 최근에는 선체 처리 계획과 매립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도 열렸다. 부지 일대 대기·소음·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평가 결과·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우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부지 기반 조성 공사부터 한다. 계획대로 라면 매립부터 기반도로 공사가 끝나는 2027년 하반기에 선체 이동 작업이 시작된다. 2017년 인양 이후 8년째 목포신항만에 임시 거

치된 세월호를 1.7km 옮기는 작업이다. 육중한 선체는 임시 거치 당시에 도 쓰면 특수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를 통해 옮겨진다. 선체 이동 이후에는 안전적 거치, 부식 방지 등 영구 보전 작업이 진행된다. 추모·기억·교육·체험 전시관 등 복합시설로 꾸려진 부속 건축물을 짓는 공사도 동시에 펼쳐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참사 15주기를 맞는 오는 2029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부지 조성 공사도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사업비 증액 등 향후 변수도 있어 정확한 준공 시점은 불확실하다. 유족들이 애타계 희생자 유해를 기다리던 진도 팽목항 인근에는 해양 사고 교육·체험 시설 ‘국민해양안전관’이 지난해 문을 열었다. /김 호 기자

“尹재판 촬영 불허는 명백한 특혜”...민주당, 재판부에 철회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와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도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

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하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

이 현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제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이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출마 김경수 “행정수도 세종 이전” “빛의 연정 구성”...당내 네 번째 출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또 내란 반대 진영이 연합 정부를 꾸리는 ‘연정’ 구상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추진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 등 3대 축 중심 국가 투자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성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까지 당내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총 4명이다.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저는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각자의 꿈을 꺼내 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비상계급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 출범 즉시 ‘100일의 대타협과 비전’ 구축 ▲대선 반대 세력이 함께 모이는 빛의 연정 구성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

유승민 “국힘 대선 경선 참여 안해”

“반성·변화의 길 거부...기득권 집착하는 모습 분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패배를 기정 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이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 개혁보수를 원하는 ‘중수층’(중도·수도권·청년)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권 저울질하는 한덕수, 양심 있나”

민주당 “내란 범죄자 배출한 정당...거취 명확히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국정을 불모로 대권을 저울질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심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를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덕수 대행이나 국민 앞에 엮이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현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배출한 정당이다. 불법계엄과 내란을 획책하는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가면 당하게 만든 실패한 국무총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방조하고 일조했던 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겠다며 국정을 불모 삼고 있다.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접어두고, 국민 앞에 처절한 반성부터 하라”고 보았다. 또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한다. 국정을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하는 일에 이용하지 마라”며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부여된 책무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자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여전히 자리에 앉아 대선 국면을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하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뉴스1